



##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역사자원의 보존과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19년 7월 16일 (화) 14:00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 진행순서

- 사회 : 김상영 행정자치전문위원

### 1부. 개회식(14:00 ~ 14:20)

- 개 회
- 국기에 대한 경례
- 개회사(정민구/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

### 2부. 정책세미나(14:20 ~ 16:00)

- 좌장 : 문순덕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 주제발표 : 제주의 역사적 기억과 평화관광 육성을 위하여  
(정근식/서울대학교 교수)

### 토론자

(4명/가나다순)

- 국성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고재대 : 5·18기념재단 교육문화부장
- 백가윤 : 제주다크투어 대표
- 현혜경 :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 목차

### 개회사 ..... 4

### 주제발표

"제주의 역사적 기억과 평화관광 육성을 위하여"

정근식(서울대학교 교수) ..... 5

### 토론문

- 국성하(대한민국역사박물관) ..... 19
- 고재대(5·18기념재단 교육문화부장) ..... 25
- 백가윤(제주다크투어 대표) ..... 43
- 현혜경(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 49

### 부록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5

## **개회사**

● 정민구/ 4·3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지역은 섬이라는 물리적 환경과 지정학적 여건에 의해 다양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매 고비마다 맺힌 원한, 비통함을 녹여내어 생명과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냈습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밑거름으로 삼았습니다.

제주 섬 곳곳에는 역사적인 사건, 다크 투어리즘과 관련된 자원이 술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항일운동, 한국전쟁, 4·3사건 및 기타 재해·재난 등 다양한 사건 자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원의 경우 제주 정체성을 유지하고, 제주관광 차별화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뚜렷한 목표를 두고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를 찾는 방문객들은 제주만의 차별화된 상품으로 다크 투어리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역사 현장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독특한 관광자원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크 투어리즘은 후세대를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역사기억에 대한 올바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지역의 어두운 과거, 부정적인 장소자산을 자원으로 활용한 역사관광상품은 지역 정체성 유지와 관광상품 다양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목표를 두고 체계적인 활용단계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다양화 등 질적인 발전 단계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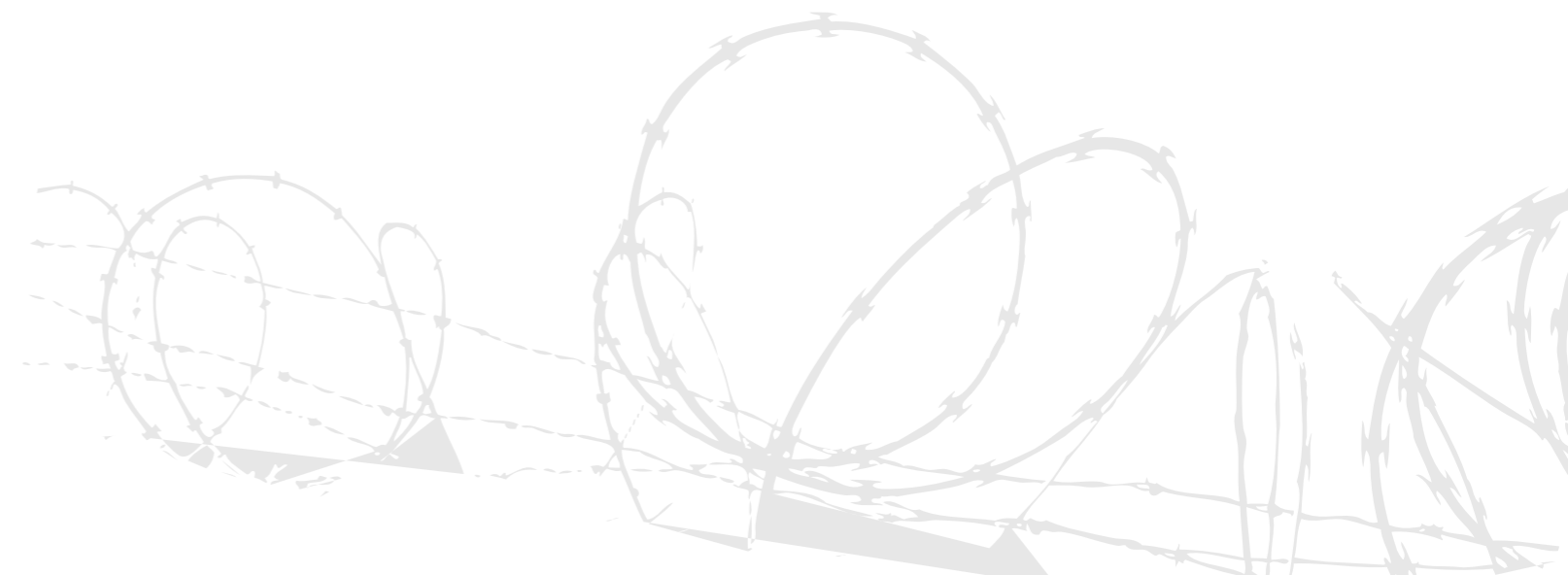
오늘 토론회에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다양한 의견은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 조례를 만드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주지역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길목에서 여러분들의 고견을 기대합니다.

## **주제 발표**

### **제주의 역사적 기억과 평화관광 육성을 위하여**

● 정근식 / 서울대학교 교수



# 제주의 역사적 기억과 평화관광 육성을 위하여

정근식(서울대학교 교수)

## 1. 머리말

제주도에서 4.3사건과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고, 당시의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작업은 지금으로부터 30년전 4.3연구소에 의해 시작되었고, 4.3증언을 채록하여 4.3의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을 하던 제민일보도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였다. 초창기부터 2005년까지 이런 장소를 방문하고 학습하는 것을 ‘4.3문화기행’으로 명명하였다.

2006년 11월, 제주 민예총이 주최했던 회의에서, 필자는 「4·3진상규명운동, 제도화와 문화자원화」라는 제목의 발표를 하면서, 4.3과 연관된 학습이나 추모를 위해 방문하는 것을 다크 투어리즘으로 규정하고, 이런 관광이 자연생태관광과 함께 발전해야 제주관광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행스럽게도 이후에 현혜경(2008)과 장윤식(2008) 등의 연구자들이 이런 제안을 수용하여, 다크 투어리즘에 관한 논의를 발전시켰다. 2008년에 출범한 4.3평화재단은 평화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 관한 기초정보를 조금씩 축적하기 시작하면서, 제주지역 다크 투어리즘에 관한 연구는 경험적 자료에 입각한 분석이 가능해졌다. 강은정(2011; 2012), 고승익(2012;2013), 김석윤(2012), 장혜원(2011; 2012;2014) 등의 연구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제주도의 관광산업의 발전에서 다크 투어리즘이 차지하는 의미나 비중에 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사실 제주도의 관광산업은 2010년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2016년에는 한 해 방문객이 1,500만명을 넘었고, 특히 중국인 관광객의 폭증은 굳이 다크 투어리즘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제주도의 관광산업이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사드문제가 쟁점이 된 이후 제주관광의 증가 추세가 꺾이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였지만, 관광산업에 대한 분석이 좀더 체계화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듯 하다. 한가지 예로 제주관광공사의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현황 정성조사 보고서』는 다크 투어리즘은 별도의 문항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주도의 정체성과 다크 투어리즘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동시에 상당히 다양한 시각과 평가가 가능하다. 필자가 보기에 제주도에서 4.3문제는 적어도 1998년 이후 지역정치사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4.3의 비극적 사건을 상기하고 이의 진실과 명예회복을 이루는 것이 이행기 정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해왔다. 4.3 특별법에 의한 문제 해결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면서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왔다. 그것만큼 제주도민들의 자긍심을 충족시키는 상징적 자원은 없었다. ‘평화의 섬’을 가장 경험적으로 지지해주는 것이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제주도 외부에서 4.3기념식에 참석하거나 4.3유적지를 찾아 희생자들을 기리고, 역사적 고통에 공감을 표시하는 것은 제주도민의 긍정적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4.3기억과 그것의 세대적 전승, 그리고 기억의 세계화라는 과제는 철학적 규범적 문제일 뿐 아니라 경제적 문제이기도 하다. 어떻게 하면 4.3관련 학습과 관광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를 통하여 제주도의 평화산업을 지탱하는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글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한 것이다. 시간적 제약 때문에 필자의 생각이 충분히 정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토론을 통해 좀 더 정리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

## 2. 다크 투어리즘과 평화관광

돌이켜보면,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운동은 민주주의로의 이행기에 형성되어 지난 20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위한 법률적 기초인 4.3특별법이 1999년말에 제정되었고, 이에 근거한 진상조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며,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이를 기념하기 위한 평화공원이 조성되었다. 4.3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대통령도 몇차례 제주를 방문하여 기념식에 참여하였다.

제주 4.3특별법에 의해 1단계 진상규명이 완료되고,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는 2005년 정부에 의해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고, 2006년 7월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즉, 제주도 지방자치의 새로운 출발과 동시에 ‘평화’가 지역공동체의 공통적인 지향을 나타내는 이념이 되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서 제주도는 ‘평화’ 개념을 중심으로 한 지역적 통합과 문화정책, 산업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지정은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준거로 한 파격적인 개방경제의 실험이기도 한데, 이런 실험이 ‘평화’라는 인류적 이상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쏠렸다(정근식, 2014).

지난 20년간 ‘4.3’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4.3에 대한 지적 자극과 새로운 해석, 4.3기념주체들의 헌신적인 노력 등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역설적으로 4.3의 진상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사건들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긴장을 제공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동안 제주 4.3을 바라보는 시야도 상당히 넓어졌다. 국내적으로 여순사건이나 한국전쟁기의 예방학살과의 연관성을 넘어서서 일본의 재일 조선인 사회는 4.3사건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된 것으로 인식되었고, 오키나와전투나 대만의 2.28사건이 4.3사건과 맥락을 같이 하거나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4.3사건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근래에, 특히 작년 4.3 70주년을 지나면서 제주사회는 앞으로의 4.3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몇가지 장애물에 부딪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운동은 희생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전개되어 왔다. 그런데, 이행기 정의의 보편적 원칙이 비추어보면, 책임자 처벌이나 피해 보상문제를 제외한 명예회복 프로젝트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의 4.3특별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20년전, 4.3특별법 제정운동을 할 때는 명예회복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에 보상문제는 언급하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문제를 제기하기에는 정치적인 역량이 부족했다. 근래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4.3특별법 개정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4.3운동의 성과로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되었고, 또 평화의 섬을 표방했다. 그런데 평화의 섬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좀더 밀고 나갈 때 부딪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 현대 사회에서 평화 프로젝트는 지방이나 국가를 넘어서 (동아시아) 지역 또는 세계적 스케일에서 전개되는 것이어서 특별자치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율성에 한계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이 무겁고 어려운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 강정문제가 이를 잘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평화의 섬’ 정체성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제주평화포럼도 평화를 제외한 제주포럼으로 바뀌었다.) 그렇다고 해서 평화의 섬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어렵게 쟁취한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지 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우리가 지금까지 4.3 문제를 냉전분단체제 형성기의 국가폭력의 문제로 접근해왔다면, 이와는 달리 더 높은 수준에서 작동하는 세계적 패권과 질서의 문제로 접근하도록 한다. 우리는 최근의 국제정세의 변화를 겪으면서 냉전분단체제의 형성기 뿐 아니라 해체기까지를 시야에 넣어 분단폭력의 문제를 사고해야 하고, 또 평화실현의 환경이 미중간 화해와 협력이 중시

되는 시기와 양자간 경쟁과 갈등이 다시 부각되는 시기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세계적 질서의 재편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경쟁과 갈등이 우리의 평화나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넷째, 제주 사회의 일각에서는 4.3문제를 희생 패러다임이 아닌 봉기 패러다임으로 바라보는 흐름이 없지 않다. 이런 시각은 강력한 통일주의, 또는 반패권주의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국가 형성과 냉전의 동시적 형성기에 자주적인 민족국가를 형성한다는 이상주의가 현실에서 유효한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되어 북한과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통일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유효성은 현저히 약화될 수도 있다.

다섯째,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 의제는 제주도보다는 경기도와 강원도의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에서 생성되고 있다. 오늘날 문재인 정부는 북한비핵화와 남북화해라는 과제를 추진하면서 다양한 평화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다. 거시적 담론으로는 평화경제와 평화벨트의 조성을 지향하며, 미시적으로는 생태평화공원, 평화의 길 조성,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시범 해체와 유해발굴 사업들을 수행하였다. 물론 평화경제라는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좀더 발전시켜야 하지만, 평화관광이 평화경제의 일부인 것은 확실하다. 평화관광은 장기적으로 평화산업과 평화경제의 발전을 지향한다. 평화를 향한 사회적 경제의 발전이 평화관광의 목표이다. 다크 투어리즘도 평화관광과 유사한 목표와 내용을 가진다. 그러나 양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또는 학문적인 영역에서의 논의와는 달리 정책적 차원에서 어떤 용어가 더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단계의 평화패러다임이 도입되면서, 평화를 품은 장소로서의 제주도의 위상은 상당히 흔들리고 있거나 약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3. 다크 투어리즘의 현실

제주도 관광산업은 2010년 이래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2010년 제주 방문객이 757만명이었는데, 2016년에는 1,585만명을 기록하여 100% 이상 증가하였다. 물론 이러한 증가는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사드문제로 인하여 2017년부터 방문객이 감소하여 2018년에는 1,431만명이 되었다. 물론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이것 또한 90%이상 증가한 것이기는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과의 국제 관계가 제주도의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아래 표가 보여주듯이 관광객 증가와 유입인구 증가는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관광객의 증가가 인구유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제주도 관광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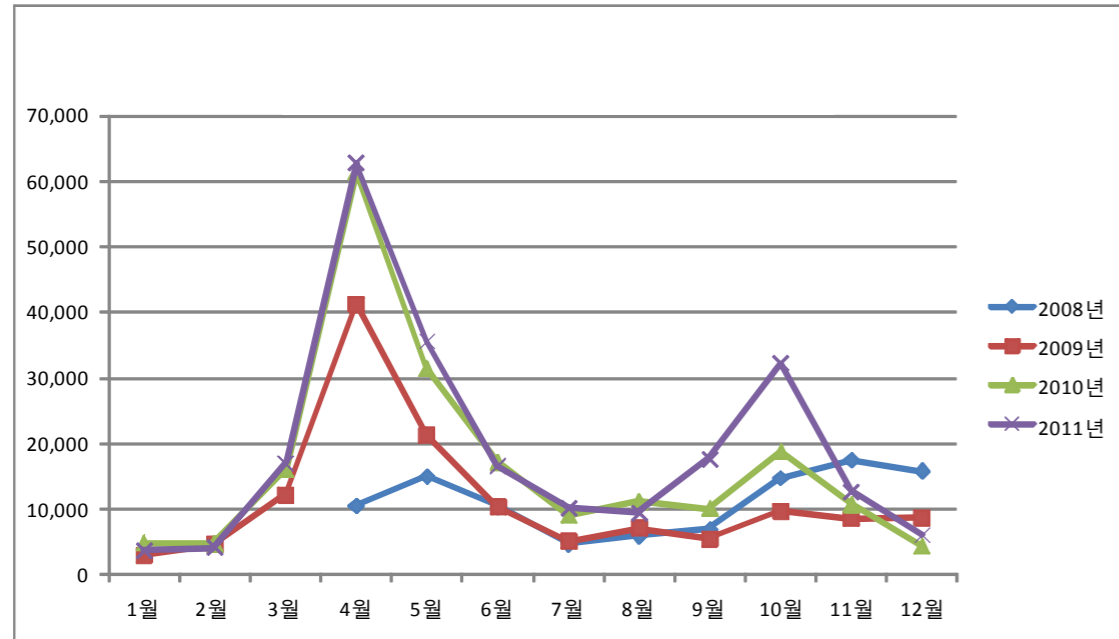
제주도에서 지속가능한 생태적 환경을 염두에 둘 때 어느 정도의 유입인구와 어느 정도의 관광객이 적절한지는 알 수 없다.

제주도의 다크 투어리즘은 어떤가? 완벽한 것은 아니나 제주도 다크 투어리즘의 대표적인 시설인 4.3평화공원 관람객의 추이로 이를 설명할 수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8년부터 2년간 관람객이 증가하여, 2010년에는 20만명이 방문하였다. 2008년에는 도내 관람객이 6만 6천명, 도외 관람객이 3만 4천명으로 도내가 많았지만, 2009년 이후 도외 관람객이 훨씬 많아졌다.

4·3 평화기념공원의 초기 관람객 통계는 계절에 따른 방문객의 증감을 잘 보여주었다. 4.3평화재단은 관람객이 4월에 집중되는 단봉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림 2> 4·3 평화기념관 관람객 추이





출처: 정근식(2014)

2014년 이 기념관과 기념공원 방문객은 많이 감소했는데, 2016년에 다시 20만명 선을 회복하였고, 2018년에 급증하였다. 개장 첫째인 2008년에서 2년후인 2010년에 두 배가 되었고, 2018년에는 44만명이 방문하여 다시 두 배가 되었다. 이런 평화공원 관람객의 추이는 전체 관광객 증가추이에 약간 미치지 못하지만, 2018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전체 관광객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2010년의 경우 4%미만이었고, 2018년에는 비중이 더 줄었다. 장기적인 발전목표와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 4.3 평화공원 연도별 관람객 추이

구분	합 계	도내		도외		외국인	어린이 체험관
		개인	단체	개인	단체		
2018	444,813	54,482	33,546	179,661	166,428	2,860	7,836
2017	233,276	32,412	18,353	72,472	108,466	1,573	-
2016	201,008	22,901	29,449	56,341	90,447	1,870	-
2015	161,023	16,042	28,533	39,762	74,786	1,900	-
2014	140,719	13,071	29,314	36,055	59,975	2,304	-
2013	199,765	13,124	33,615	39,370	111,728	1,928	-
2012	211,950	13,155	35,568	35,166	126,101	1,960	-
2011	228,528	18,760	43,563	37,186	127,133	1,886	-
2010	202,026	18,679	43,539	29,369	108,814	1,625	-
2009	132,536	19,506	36,399	21,006	53,196	2,429	-
2008	101,774	41,284	25,097	9,854	24,539	1,000	-

\*자료: 4.3 평화공원

4.3평화재단은 다크 투어리즘 관광객의 편의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해설사 제도를 도입하고 단체 관광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매년 50개 단체 이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2> 4.3 유적지 문화해설사 지원 현황 (2016-18)

	도내 단체	도외 단체	인원	해설사
2016	9	14	2,074	53
2017	46	13	3,419	103
2018	35	24	3,684	115

제주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크 투어리즘의 실태에 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장소별, 테마별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좀더 나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이 쉽지 않다. 잠재적 자원, 개발되어야 할 프로그램, 선호하는 장소, 사회경제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크 투어리즘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4.3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4.3사건은 1947년 3.1절 기념식이 도화선이 되었고, 1948년부터 1954년까지 지속되었다. 대만의 2.28사건과 1947년 3.1절 기념식은 하루 차이이다. 1948년 4.3 봉기는 지금까지 5.10선거를 단정 수립을 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당시 만주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던 국공내전의 상황이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을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다크 투어리즘의 자원에 관한 논의는 제주 4.3연구소가 2005년에 수립한 <제주 4.3유적 종합 정비 및 유해발굴 기본계획>은 좋은 길잡이가 된다. 여기에서는 4.3유적을 잠재적 문화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보존 유적 4개소, 복원 유적 6개소, 정비유적 9개소로 선정하였다. 이 장소를 인권 평화 교육의 학습장으로 만드는 것을 문화자원화와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런 장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군이 남겨놓은 군사시설, 학살장소, 무덤, 항쟁장소, 도피처 등에 주목할 수 있다. 이외에 중요한 자원이 잃어버린 마을과 전략촌 유적들이다.

제주도의 전략촌 사례는 김은희의 의미있는 연구(2006)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연구가 이루어진 3년 후인 2009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 전략촌이 복원되었다. 이 유적지는 4.3사건이 한창이던 1948년 11월부터 산간 마을에 대한 군경의 초도화 작전으로 선흘리 마을이 불에 타 버리고 나서 이듬해 봄 정부의 명령에 따라 마을을 재건하기 위해 세운 것이었다. 제주도의 전략촌 경험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제주도의 전략촌은 4.3을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시켜준다.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보면, 4.3사건이 발생한 후 2개월 뒤에 영국의 식민지로 남아 있던 말라야에서 화교 공산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봉기가 6월 16일에 발생하였다. 봉기의 주체는 말라야 인종해방군, 또는 말라야 민족해방군으로 불린다. 영국군이 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전술의 하나가 전략촌 형성을 통한 주민분리 전략이었다. 이는 제주도의 중산간지역에 적용된 주민소개와 전략촌 만들기 전략과 유사했다. 말레이시아가 독립된 후, 1960년대 초반에 본격화된 베트남전쟁에서 이 전략촌이 다시 중요한 전략으로 채택되었다. 1962년 베트남에서 전략촌을 건설할 때, 말레이시아의 경험이 중시되었는데, 충분한 연구가 없지만, 제주도의 경험도 계획수립에 참고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전쟁이 진행 중에 있던 1952년, 제주도는 두 개의 중국군 포로수용소가 세워졌다. 하나는 송환포로용이었고, 다른 하나는 비송환포로, 즉 반공포로용이었다. 제주도의 포로수용소는 현재의 제주공항과 모슬포지역에 있었다. 모슬포 지역의 유적을 적절한 수준으로 이를 복원하는 것도 다크 투어리즘의 자원을 확충하는 유력한 방법이다.

다크 투어리즘의 확충이나 발전을 위해서는 제주에서 이루어지는 의례, 공연, 전시, 드라마나 영화, 회의(평화포럼)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잘 정리하여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형성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드라마나 영화를 통한 제주도 평화의제의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 '평화한류'의 출발지로서의 제주 이미지가 형성

될 필요가 있다.

다크 투어리즘을 포함한 관광산업의 지속적 발전가능성은 매력, 경쟁력, 생태적 수용능력 등의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제주도의 잠재적 관광시장이 최근에 중국에서 형성되었다면 가까운 장래에 동남아시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새롭게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해외 관광수요가 크게 증가하며, 이를 제주도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학습과 준비가 필요한데, 다크 투어리즘의 입장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 4.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언

제주도는 육지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거리감, 독특한 화산지형과 생태적 건강함, 그리고 돌하르방 문화, 해녀 문화등 문화적 독특성 등으로 인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관광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자연경관의 보존, 매력적인 문화경관의 형성이 필요하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제주도의 주택과 건물 경관은 좀더 뚜렷한 특성화가 필요하다.

제주의 다크 투어리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역사적 현장을 잘 보존하고, 문화예술적 자원의 발굴과 체계화, 국내외 네트워크의 강화, 지원을 위한 장치로서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제주도의 경우, 역사적 자원은 풍부하나 이를 활용하여 문화상품으로 전환시키는 역량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며, 국제적으로 이름난 문화페스티벌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국제적인 미술제나 음악제, 영화제 등을 만들지 못했다. 평화와 연관된 문화제가 육성될 필요가 있다.

현재 제주도의 다크 투어리즘의 핵심적 장소는 4.3 기념공원과 기념관이다. 기념관은 지난 10여년간 4.3사건에 대한 학습과 기억의 재생산의 중심으로 기능해왔다. 이제는 한국사회의 평화감수성의 증대에 발맞추어 전시 콘텐츠를 점검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동아시아 냉전의 전체 지도를 제공하여 시야를 확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의 역사적 경험에서 특별한 유대감을 가진 장소는 오키나와, 대만, 오사카 등이었다. 이들의 경험이 부분적으로 전시되어야 하고, 대외적으로도 지정학적 유사성, 지문화적 유사성에 기초한 파트너십이 강화되어야 한다. 물론 이런 변화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학습과 요구에 기초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다크 투어리즘을 위하여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 법률적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8조(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 ②항 "제주자치



도는 자율과 책임에 따라 지역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의 관광진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에 따라 조례를 통하여 다크 투어리즘(또는 평화관광)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기존 조례를 개정하거나 신규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하여 역사적 자원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이 조례의 73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2항을 개정할 수 있다.

제73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도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도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다른 하나는 다크 투어리즘 진흥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몇가지 쟁점이 존재한다. 첫째, 명칭을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할 것인가, 평화관광이라고 할 것인가? 주체를 다크 투어리즘 육성위원회로 할 것인가, 평화관광 진흥위원회로 할 것인가? 둘째, 지원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는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 홍보 및 행사 지원, 주민 참여형 사업 활성화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강만익, 2018, 「제주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활용방안」, 『탐라문화』, Vol. 57, p.273.
- 강은정, 2011, 「Dark Tourism 방문객의 체험연구 - 제주4·3평화기념관 사례를 중심으로」, 제주관광학회 학술대회, pp.25-37.
- 강은정·고승익, 2012, 「제주지역 다크투어리즘에 대한 고찰 - 일제 강점기를 중심으로」, 『제주관광학연구』, Vol. 15, pp.5-21.
- 강은정·이정렬, 2011, 「The Dark Tourism Experience」, 『관광레저연구』, Vol. 23(7), pp.547-566.
- 고승익, 2012, 「제주 근대문화유산의 다크투어리즘 활성화 방안」, 『제주관광학연구』, Vol. 15, pp.47-63.
- 고승익, 2013, 「제주 세계유산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방안 모색」, 『제주도연구』, Vol. 39, p.71.
- 김석윤·김태일, 2012, 「제주 4·3 Dark Tourism 방문객 의식에 관한 연구: 제주 4·3 평화공원 및 너븐숭이 기념관 방문객을 대상으로」, 『제주도연구』 37.
- 김은희, 2006, 「제주 4·3시기 '전략촌'의 형성과 주민생활: 선흘리 낙선동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Vol. 23, pp.181-210.
- 남제주군, 2005, 『모슬포 전쟁유적지 관광자원화 기본계획수립 보고서』, 남제주군.
- 송재호·남윤섭·김석윤, 2012,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다크 투어리즘 코스 형상화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저널』, Vol. 26(5), pp.165-182.
- 이규배 외, 2005, 『제주 4.3유적 종합정비 및 유해발굴 기본계획』, 제주 4.3연구소.
- 장성수·김종기, 「제주지역 관광 연구동향에 관한 고찰」, 『탐라문화』 40,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12.
- 장애옥·최병길 (2011). 「다크투어리즘 방문객의 동기와 특성」, 『관광레저연구』, 23(1), 65-84.
- 장혜원, 2012, 「다크투어리즘의 스토리텔링 요소에 관한 연구 -제주 4.3평화공원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27권1호, 251-273.
- 장혜원·김태훈·정철, 2011, 「다크투어리즘 참가자의 방문동기 -제주 4.3평화공원 방문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비교-」, 『관광학연구』, Vol. 35(6).
- 장혜원·최병길·송재호, 2012, 「다크투어리즘 참가자의 환경지각에 관한 연구 -제주 4·3평화공원을 대상으로-」, 『관광학연구』, Vol. 36(9), p.157.
- 장혜원, 2014, 「다크투어리즘의 고유성에 관한 연구 : Cohen의 장소적 고유성을 중심으로」, 『제주관광학연구』, Vol. 17, pp.66-89.
- 장윤식, 2008, 「제주지역 다크투어리즘 활성화 방안」, 『제주의 환경을 말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
- 정근식, 2007, 「4·3진상규명운동, 제도화와 문화자원화」, 『제언과 발언: 제주민예총정책자료집』 1, 도서출판각. pp.99~116.
- 정근식, 2009, 「4·3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 제주 4·3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 정근식, 2014, 「4·3의 기억과 재현 그리고 다크 투어리즘」, 『4.3과 역사』, Vol. 13, pp.263-306.
- 정근식, 2016, 「동아시아 '냉전의 섬'에서의 평화 사상과 연대」, 『아시아리뷰』, Vol. 5(2), pp.211-232.
- 조아라, 2013, 「다크투어리즘과 관광경험의 진정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 19(1), pp.130-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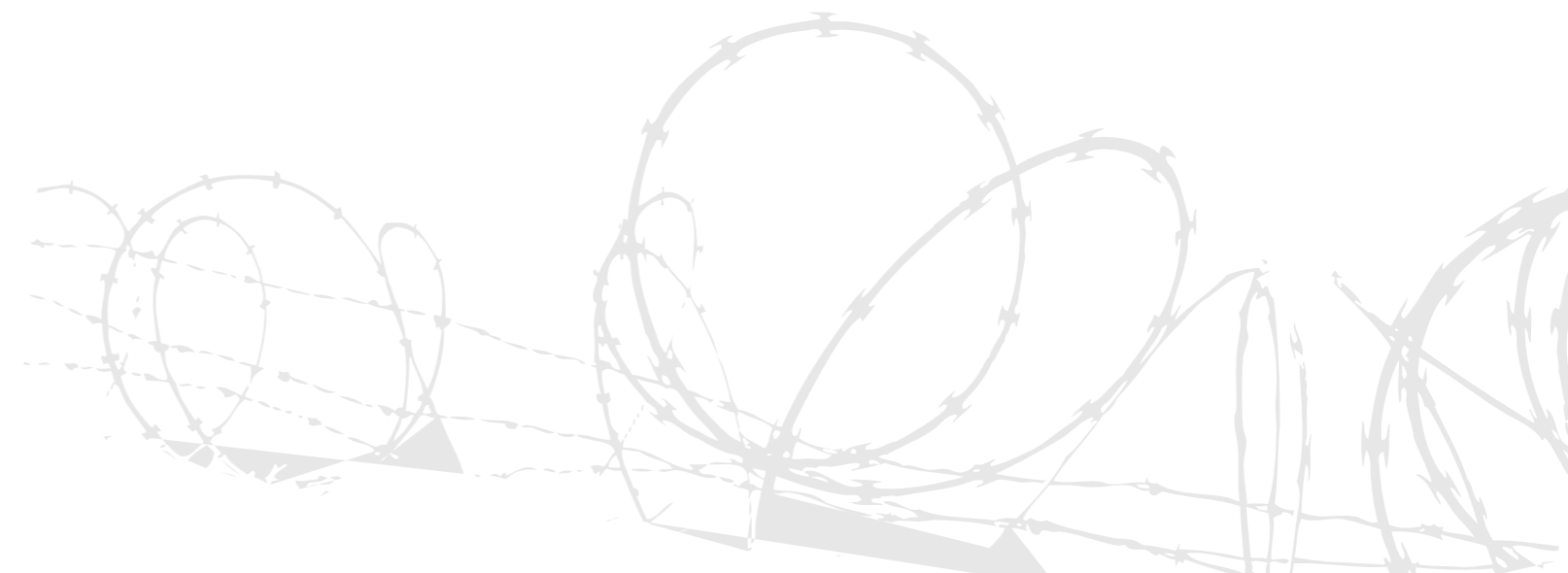
현혜경, 2008, 「제주4·3의 기억과 다크투어리즘 - 사회문화운동으로의 전망」, 『4.3과 역사』, Vol.8, pp.306-339.

제주관광공사, 2018,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현황 정성조사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제주관광공사.



## 토론문

- 국성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역사자원 보존과 활용 방안 마련 관련 토론문

국성하(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 제정은 고난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지켜낸 역사적 사실과 고난의 역사를 평화와 상생의 가치로 승화시킨 현재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후대에 전달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며, 미래의 교육으로 삼기 위해 다양한 일들을 제주 사람들이 해 왔음을 전제하고, 이는 제주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문객이 제주의 아픈 역사를 자연스럽게 보고, 느끼고, 이해하는 현재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러한 어두운 역사를 알리는 일을 - 이미 해 왔지만 -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 가칭)'으로 정의하고 이를 육성,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토론문을 적었습니다.

### 1.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명칭에 대하여

[조례(안)] 제2조(정의)에서는 “다크 투어리즘이란 43사건 등 제주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의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생명·평화·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역사교육 관광을 말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실제로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말은 Foley와 Lennon이 1996년 「Heart of Darkness」라는 사설에서 사용하였고, 2000년 그들이 저서 『Dark Tourism』을 출간하면서 보편화되었습니다. 죽음과 재난에 관련된 실제 또는 가공의 장소의 전시물을 방문하는 것, 문화유산관람과 순례관람의 성격으로 재난과 참상지를 보면서 반성과 교훈을 얻는 특별목적의 관람 등으로 '다크 투어리즘'은 정의되고, 다른 명칭으로는 'Black Spot Tourism', 'Morbid Tourism', 'Grief Tourism'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국립국어원은 '다크 투어리즘'의 순화어를 '역사교훈여행'이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sup>1)</sup>

'다크 투어리즘'과 유사한 개념을 지닌 다른 명칭이 사용되고,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제안한 다

1) 장성곤, 강동진, 「지속가능한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의 개념 정의와 전개과정 분석」, 한국도시설계학회, 『도시설계』 18(2), 2017. 4, 66쪽(재인용).

들은 말이 ‘역사교훈여행’인 점 등을 감안하여, [조례(안)]에서 명칭을 순화어로 바꾸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국립국어원은 ‘다크 투어리즘’을 대신할 우리말을 확정하기 위해 누리꾼이 제안한 427건의 명칭 가운데 원래의 의미를 살리면서 우리말 단어 구성에 맞는 ‘뒤안길여행’, ‘비극역사여행’, ‘역사교훈여행’, ‘역사반성여행’, ‘참사현장여행’ 다섯 가지를 후보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역사교훈여행’이 1,895명 중 1,015명(53%)을 얻어 다듬은 말로 결정되었습니다.<sup>2)</sup> 아울러 [조례(안)] 제2조(정의)에서 ‘43사건’은 제주43평화재단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주43’으로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 2. ‘다크 투어리즘’ 육성과 지원계획에 대해서 : 지역의 사람들과 공동체의 고려

‘다크 투어리즘’은 어두운 역사가 최근의 것일수록 더 그 지역 사람들의([조례(안)]에서는 이 해관계자) 참여가 필요합니다. 제주에서는 제주43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봅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1986년 4월 26일 소비에트 연방(현재의 우크라이나 지역) 체르노빌에서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0만 명이 피난을 갔으며, 피해자의 수도 4천에서 1만 6천명에 이릅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이 지역을 1990년대 중반부터 견학할 수 있게 되었고, 2011년부터는 일반인들의 관광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관광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방사능 오염으로 접근이 금지된 체르노빌 금지구역(일명 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석관(방사능 물질 방출을 막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어서이기도 했지만, 그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부터입니다. 리크비다따르라는 사고처리 작업원(원전노동자, 소방관, 경찰관, 자원봉사자 등)이 있고, 사마설이라는 자발적 귀향자, 그리고 스토커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인류의 유산을 탐색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sup>3)</sup>

**[911 추모기념공원]** 2001년 9월 11일에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 등의 테러로 3천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세계무역센터가 있던 곳을 911 추모기념공원으로 만들고 지하에 기념관을 두었습니다. 추모공원 내에 2개의 인공폭포에는 희생자의 이름을 동판에 새기고, 지하의 기념관으로 이어지는 긴 동선을 통해 자연스럽게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911 테러 당시의 수많은 희생자들을 조사하고, 시각화하여 추모기념관 내부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관람자들이 2001년 9월 11일의 어두운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조례(안)]에서 제주 사람들(공동체)의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담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http://www.korean.go.kr>

3) 아즈마 히로키 외 지음, 양지연 옮김, 『체르노빌 다크 투어리즘 가이드』, 마티, 2015.

## 3. ‘다크 투어리즘’: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장성곤 등은 ‘다크 투어리즘’의 장소, 유형별 사례를 현장 존재형(완전일치, 부분일치, 연접, 분리), 현장 부재형, 현장 복합형으로 나눕니다.<sup>4)</sup> 제주의 항일운동, 제주43 등은 일종의 현장 존재형(부분일치), 현장복합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이를 어떻게 표현할 지에 대해 적어봅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서대문독립공원 안에 위치해 있으며, 감옥이라는 역사유적이 그대로 보존된 형태입니다. 감옥이라는 공간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관람자의 이해가 시작되며,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과 공간이 만나면서 때로는 이 공간이 회화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두운 역사를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일종의 갈등상황도 생겨나게 됩니다. 때로는 공간이 가지는 어두운 측면에 따른 고통을 표현하는 관람자가 생겨나기도 합니다.<sup>5)</sup> ‘다크 투어리즘’은 이러한 관람자가 느끼는 갈등 그리고 고통의 부분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은 5·18민주화운동의 인권과 평화의 의미를 예술적으로 승화한다는 배경에서 출발하여 2015년에 개관한 교류, 교육, 연구, 전시기관입니다. 그 공간 안에 옛 전남도청이 있어,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성이 있는 곳입니다. 부분일치형이라고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은 문화예술적 측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sup>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금남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그리고 조금 떨어져 있는 국립5·18민주묘지 등과 연결되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수많은 사람들이 5·18민주화운동을 기억하며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기능합니다.

제주에서 ‘역사교훈여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제주43평화공원입니다. 제주43희생자들의 위패봉안관과 행방불명인의 표석이 있는 곳으로, 제주43의 역사를 기념관 안에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43의 배경, 전개, 진상 규명의 역사적 사실을 전시 속에서 이해하고, 제주43을 표현한 예술작품을 전시실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기영 선생님의 『순이삼촌』에서 느꼈던 가슴 아픔을 전시실 안 43백비를 통해 알리는 공간입니다. [조례(안)]이 제주의 어두운 역사를 제주도민과 제주를 찾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경험하게 하는 기초로 기능했으면 좋겠습니다.

4) 장성곤 등, 앞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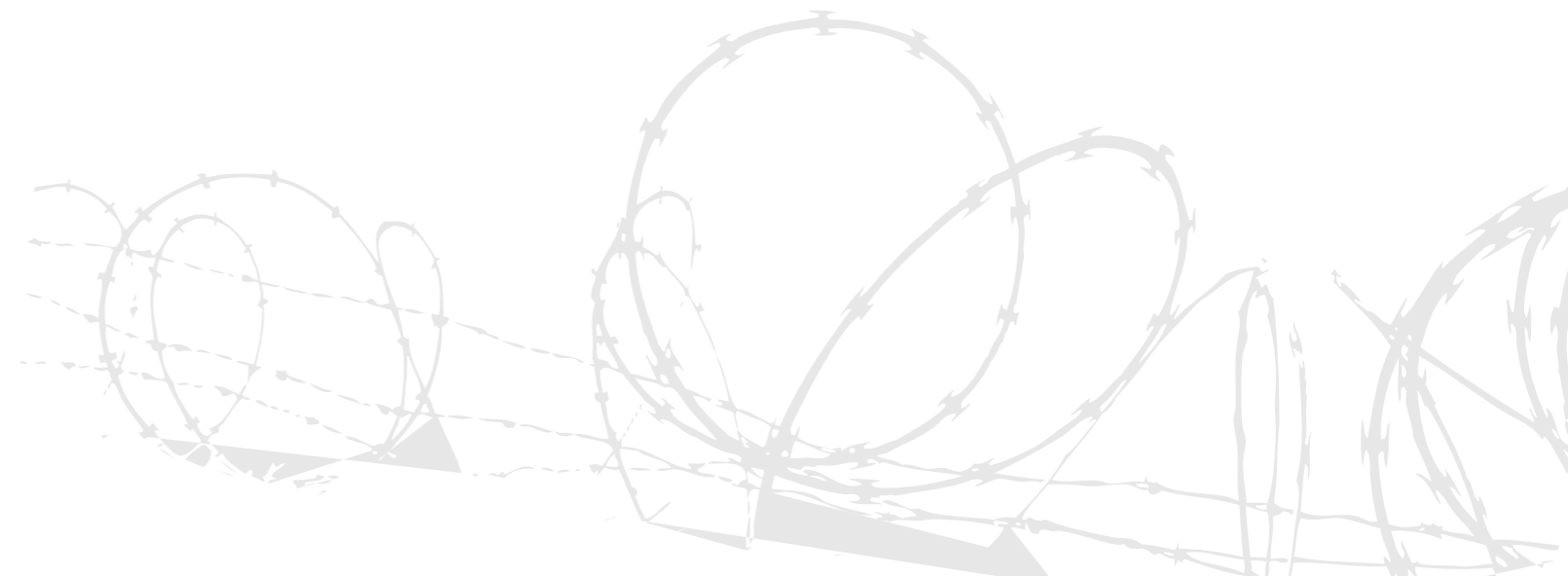
5) 김태동,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유적을 활용한 역사교육」, 한국박물관교육학회, 『박물관교육연구』 21호, 2019.6. 33-36쪽.

6) <http://www.acc.go.kr>



## 토론문

● 고재대 / 5·18기념재단 교육문화부장



# 오월길 조성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고재대(5·18기념재단 교육문화부장)

## I. 서론

지난 역사의 어두운 면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미래의 교훈으로 삼는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5·18민주화운동 또한 다크투어리즘 관점에서 관광과 매개한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요구되었고 현재도 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현실을 두고 볼 때 제주의 다크투어리즘관광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관광도시로서 제주가 갖는 다양한 장점을 두고 볼 때, 지난 역사의 어두운 면이지만 이를 미래 상생의 가치로 관광자원화하려는 제주의 시도가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필자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5·18의 상징적 공간을 통해 문화관광자원화하려는 노력은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오월길 조성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토론은 제주의 다크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부족하나마 광주의 오월길 사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 II. 오월길 조성 배경

### 1) 5·18민주화운동 사적지의 개념

광주광역시에는 5·18 당시 주요한 항쟁지 등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공간을 5·18사적지로 지정하고 5·18민주화운동(이하 "5·18"이라 한다) 관련 사적지와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복원 및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 조례(『광주광역시 5·18사적지 보존·관리 및 복원 관리에 관한 조례(2005. 6. 30 제정)』)를 제정하여 관련 5·18사적지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5·18기념사업이 목표로 삼아야 할 내용은 광주라는 장소에 응축되어 있는 기념성과 역사성, 장소성을 광주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이 친근하게 같이 느낄 수 있고, 기억하며 후세에 길이 남겨 민주화투쟁의 역사·교육의 장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각종 5·18기념행사와 더불어서 5·18 관련 장소가 갖고 있는 기념성과 역사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역사적 현장을 잘 보존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는 집단기억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기념방식이기 때문이다.<sup>1)</sup>

이에 광주광역시시는 지난 1998년 광주광역시내 24곳을 첫 사적지로 지정하고 표지석을 설치하였다. 이는 1995년 광주광역시시의 『5·18기념사업 종합계획』수립 이후 기념의 물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5·18기념사업의 기초적이면서 체계적인 접근의 시발점이었다.

## 2) 5·18사적지의 현황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5·18민주화운동의 집단적 기억을 되새기고, 시민들에게 경험을 전승하며,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사적지 지정과 보존 사업을 각각 실행했다.

1996년 『5·18 기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한 전라남도는 5·18민주화운동 사적지는 지정하지 않고, 1998년 5월에 도내 8개 시·군에 73개의 안내판과 표지석 설치를 완료하였다.

광주광역시시는 1997년 『5·18관련 유적지 조사 및 보존에 관한 기본·설계』를 수립하고, 이를 근간으로 삼아 1998년에 시내 24개소를 사적지로 지정한 후 26개의 안내판과 표지석을 설치. 이후 광주광역시시는 3곳의 사적지를 추가로 지정하고, 2개의 표지석을 설치(1곳은 협의 중)하여 2019년 현재 총 29개 장소에 32개의 시설이 현존하고 있다.<sup>2)</sup>



1) 김동수외, 『5.18관련 사적지 조사 및 보존에 관한 기본 조사·설계』, 전남대학교5·18연구소, 1997, 14p

2) 정호기,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공간 조사·연구』, 5·18기념재단, 2015, 25p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사적지현황

사 적 지 명	지 정 사 유
1. 전남대학교 정문	·5·18진원지
2. 광주역 광장	·5. 20 밤 계엄군과의 격전지
3. 구 시외버스공용터미널 일대	·시민과 계엄군의 수차례 격전지
4. 금 남 로	·시민군 격전지 ·최초 연좌시위
5. 도청과 5·18민주광장	
5-1. 도 청	·시민군본부 및 최후 항전지
5-2. 5·18민주광장	·주 시위장소
5-3. 상 무 관	·당시 희생자의 시신안치소
5-4. 광주YMCA	·시민군에 총기사용 훈련시킨 곳
6. 광주YWCA 옛터	·시민군의 작전회의장소
7. 광주MBC 옛터	·5. 20 밤 5.18왜곡보도에 대한 반발로 방화
8. 녹두서점 옛터	·항쟁대책 논의장소 ·궐기대회준비 및 현수막, 화염병 제작 장소
9. 전남대학교병원	·5·18부상자를 헌신적으로 치료한 곳 ·병원옥상에 시민군이 경기관총을 설치 저항한 곳
10. 광주기독병원	·5·18부상자를 헌신적으로 치료한 곳
11. 구 광주적십자병원	·5·18부상자를 헌신적으로 치료한 곳
12. 조선대학교	·5. 17 밤 계엄군이 주둔하였고 시민 중간 연행지
13. 배고픈다리 일대	·시민군의 모범적인 지역방위를 했던 곳 ·22일 자정 계엄군과 30분간 총격전을 벌였던 곳
14. 주남마을 인근 양민 학살지	·5. 21 계엄군이 도로를 통과하는 미니버스에 총격을 가해 17명이 사망하고, 1명 부상당한 곳
15. 광목간 양민 학살지 (진월동, 송암동)	·5. 24 저수지에서 목욕하는 아이들을 조준사살한 곳 ·인근 송암동 도로변에서 계엄군간 오인사격 사망 다수
16. 농성광장 격전지	·5. 22 이곳에 장애물을 쌓아 계엄군의 시내진입 저지한 곳 ·5. 26 시민대표들이 계엄군의 진입에 죽음의 행진으로 저지한 곳
17. 상무대 옛터	·당시 계엄사령부 전남북 분소가 있던 곳으로 계엄군 지휘관회의와 수습위원간 협상을 벌인 곳
18. 무등경기장 정문	·5. 20 운전기사 차량시위 출발지
19. 양동시장	·시장상인들이 시민군들에게 주먹밥 등 물품을 제공했던 곳
20. 광주공원광장 - 시민군 편성지	·시민군을 편성하고 사격훈련을 실시했던 곳
21. 5·18최초발포지	·5. 19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최초 발포하여 시민이 사살 또는 부상당했던 곳
22. 광주교도소	·당시 시민군과 계엄군의 격전지, 시민고문 수용장소
23. 국군광주병원	·5·18당시 부상환자를 강제 치료하고 수용조사 하였던 곳
24. 5·18구묘지	·5·18당시 사망한 사람들이 묻혔던 곳
25. 남동성당	·5·18당시 민주인사들의 수습대책 논의장소
26. 505보안부대 옛터	·5·18당시 민주인사들을 연행·고문한 장소
27. 들불야학 옛터	·5·18당시 투사회보 제작한 장소
28. 전일빌딩	·5·18당시 계엄군의 광주진압에 맞서 시민군이 마지막까지 싸웠던 장소
29.故 홍남순 변호사 가옥	·5·18당시 민주인사들의 향후 대책논의 장소

※ 사적지 지정일: 1호~24호('98.1.12), 25호('05.4.16), 26호('07.6.27), 27호('13.10.15), 28호~29호('17.9.1)

3) 5·18사적지의 활용

‘기억하지 않는 불행한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격언은 과거 국립5·18민주묘지 지하공간에 게시된 바 있고, 5·18을 기억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이다. 5·18은 과거 군사정권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심각하게 왜곡된 교육을 받아온 바 있다. 5·18기념재단은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로잡고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민주, 인권, 평화, 저항, 나눔, 자치, 연대, 공동체)를 계승하기 위해 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기억은 유무형의 공간을 통해 추체험할 때 훨씬 생생한 것이 된다. 5·18기념재단은 지난 2001년부터 국립 5·18민주묘지, 5·18자유공원 등 5·18사적지 공간에서 사적지공간을 활용한 체험학습을 진행하였고, 2003년부터는 5·18사적지 해설사인 ‘오월지기’의 전문적인 안내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간접체험을 위한 방법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직접 경험한 ‘오월강사단’을 파견하거나 5·18주제 예술작품 공연을 사적지체험학습과 연계하여 진행하기도 한다.

4) 5·18사적지 관리의 법률적 근거

광주광역시 2005년 조례(『광주광역시 5·18사적지 보존·관리 및 복원 관리에 관한 조례(2005. 6. 30 제정)』)를 제정, 5·18사적지를 관리 운용하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도 최근 2017년 (『전라남도 5·18사적지 관리에 관한 조례(2017. 8. 10 제정)』) 제정해 사적지 보존 및 정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5·18사적지 표지석(금남로)



오월길 상징 조형물 (금남로 5·18기록관)



### III. 오월길 조성 현황

#### 1. 오월길이란

오월길은 광주의 고유한 자원인 5·18민주화운동 관련 역사 자원과 광주의 문화관광자원들을 연계한 도보투어 코스로 지난 2010년 5·18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이하여 처음 만들어졌다.

이후 2011년 문화관광부의 오월길(5.18Road)』조성을 통한 도시창조관광 활성화 사업이 선정·지원되면서 가시적인 길의 모습을 구체화하였다. 오월길 조성을 통한 도시창조관광활성화사업은 광주광역시 도시 전역에 분포한 5·18사적지와 민주인권·평화의 오월정신 관련 자원들을 스토리텔링으로 연계하여 순례하는 오월길(5.18Road)을 조성함으로써, 인본창조도시 광주를 대표하는 도시형 도보관광(walking tourism) 브랜드로 개발되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정체성 자원을 도시재생의 미래지향적 문화관광콘텐츠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인권도시로서 광주의 이미지를 긍정적·희망적·발전적 모습으로 승화시켜, 인권창조관광(human right creative tourism)의 한국 대표모델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미래형 도시문화 창출의 키워드인 ‘걷기’와 ‘공간문화디자인’을 접목함으로써, 도시일상의 가치 재발견 차원에서 광주의 5·18자원을 일정수준 관광브랜드화하였다. 이를 위해 광주 도심 곳곳에 산재해 있는 30여곳의 5·18 사적지들을 정비하여, 이곳을 거처가는 5·18과 광주의 생활·문화·예술·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탐방 및 체험길인 오월길(5·18road)이 만들어졌다.

오월길은 광주시 전역의 5·18민주화운동 사적지와 관련 공간들을 잇는 오월인권길, 오월 당시 시민들의 행적을 발견하는 오월민중길, 오월정신의 역사적 맥락을 찾는 오월의향길, 오월문화예술이 깃든 오월예술길과 광주를 넘어 전남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오월사적지를 잇는 오월남도길 등 5대 테마길 18개 코스로 설계 되어있다.

#### 2. 오월길의 역사

1987년 6월민주항쟁 이후, 광주에서는 새로운 현상이 목격되었다. 희생자들이 주로 안장되었던 5·18묘지(현재 5·18구묘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던 것이다. 방문객은 계절과 시기를 가리지 않고 꾸준하게 망월묘역과 광주를 찾았다. 대학가에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순서에 ‘망월묘역’ 참배를 포함시켜 학생들로 북적였다. 특히 4~6월에 망월묘역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5월에 정점을 이루었다. 5·18의 아픔과 고통을 공유하고 자기화하는 사람들의 증가는 5월운동을 지지하는 기반의 공고화로 나타났다. 5·18묘지의 집단 참배와 5·18의 현장 답사는 광주를 ‘민주성지’로 탄생시키는 과정이었다. 노태우 정부가 출범 직후에 망월묘역을 개조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자, 광주의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성역화’사업이라고 명명했다. 성역화는 망월묘역이 성지임을 표방하는 것이었고, 성지는 전남도청과 그 일대를 비롯해 5·18의 주요 현장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5·18의 의미와 진상을

되새기기 위해 광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지칭했고, ‘광주가 순교자의 성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고 있다’고 당시 지역언론은 평가하기도 했다. 방문객들은 광주와 광주시민이 척박한 환경에서 민주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자신들의 고충과 애로를 잘 이해해 줄 것으로 믿었고, 따뜻하게 감싸 안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sup>3)</sup>

이로써 망월동 5·18구묘지, 금남로를 비롯한 광주의 5·18 현장은 당시의 희생을 상기하는 아픔의 공간이자 나눔과 자치 연대의 공동체가 이뤄낸 승리의 공간이며, 민주화운동연장선상의 투쟁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역사교육의 현장으로써 명실상부한 민주화운동의 성지가 되었다.

5·18기념재단은 지난 2003년부터 5·18민주화운동 사적지를 찾는 순례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5·18사적지 안내해설사를 운영해왔다. 이후 2010년 오월길이 조성되고, 관련사업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5·18사적지를 포괄하는 오월길안내해설활동으로 확대 관련 해설사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3) 정호기, 「기념사업으로 본 '5·18'의 의미변용」,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71호(한국언론정보학회), 2015, 56-58p

※오월길 사인시설물제작 현황



※오월 아트프리존 조성 시설물



IV. 오월길의 운영

오월길 코스는 현재 1차사업(2010~2013년) 코스개발 및 시범프로그램운영 기간 이후, 2차사업(2015~2016년)을 거쳐 기계획한 5개길 18코스중 4개길 16코스의 개발을 완료하였다. 2차사업기간의 경우, 시설물설치와 관련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콘텐츠개발 및 기획은 전남대장소마케팅연구센터가 맡았으며 안내해설사 육성 및 운영과 안내프로그램운영을 5·18기념재단이 담당하였다.

2차사업까지 운영된 오월길사업은 현재 사업기간 종료에 따라 3차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보하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의 지원계획이 없는 상태이고,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없는 한, 잔여 3차사업 진행을 통한 오월길의 완성을 확신할 수 는 없다.



다행히 5·18기념재단이 개발된 오월길의 코스를 통한 안내해설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계사업(별개사업인 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의 일부, 제한적인 비용으로 안내자교육, 안내자활동비, 방문자센터 운영비를 감당함)을 운용하는바 제한적인 오월길사업의 명맥을 잇고 있다.

1) 오월길방문자센터 구축



※오월길방문자센터 모습, 최초개소 당시모습(좌), 현재 5·18기록관 소재 이전 모습(우)

5·18기념재단은 오월길방문자센터를 지난 2012년 3월 개소, 지난 2015년에는 현재의 5·18민주화운동기록관 1층에 이전 조성 후 상시운영 중이다. 방문자센터는 5·18주요 핵심경로인 구전남도청 인근에 위치하며 오월길방문자를 위한 편의공간 겸 다양한 정보제공 창구역할과 함께 5·18기념사업의 홍보창구로 활용 중이다. 현재 이곳에는 1명의 오월길안내해설사가 교대상주하며 방문객을 응대하고 있다. 방문자센터에는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오월길 관련 기관의 안내자료, 오월길관련기관이 발행하는 도서, 5·18체험교구를 구비하고 있으며 방문객의 컴퓨터공을 위해 의자와 탁자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였다.

2) 오월길홈페이지



※'오월길' 홈페이지 화면

5·18기념재단은 지난 2012년 광주광역시 전역에 분포된 5·18사적지와 관련자료를 스토리텔링화하여 연계, 순례하는 오월길(5·18 Road)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 이 홈페이지는 오월길을 소개하고 오월길 방문시 안내해설사를 파견받을 수 있는 온라인 예약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3) 오월길전문인력양성(오월길안내해설사 오월지기)

2001년부터 시작된 사적지 체험학습은 체험학습을 진행할 전문 강사진을 양성하는 사업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강사진 육성 사업은 2000년 '5·18 안내도우미 육성 및 운영' 사업이 최초인데, 5·18 안내도우미를 교육 및 육성하여 주로 5·18 행사주간 동안 안내가이드 역할을 맡도록 운영하였다. 이와 연관된 사업이 2001년부터 시작된 '5·18자원봉사자 육성 사업'으로, 5월주간 행사와 5·18 묘역 안내 등을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 훈련하는 사업이 함께 진행되었다.

2006년부터는 '사적지 안내지도자 육성 및 운영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사적지 중심 체험학습이 보다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국립5·18 묘지, 5·18자유공원, 5·18기념공원 등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적지를 찾는 초·중·고등학생 및 시민들에게 효과적인 안내와 역사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안내와 교육을 담당하는 사적지 안내해설사와 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오월강사단을 구성, 운영하였다. 오월지기가 안내를 시작한 2006년 이전에는 사적지 체험학습이 관심있는 교사와 그들이 인솔하는 학교 학생들로 선별적으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적지 체험학습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학습 대상을 학생만이 아닌 일반인들도 포함하기 위해 오월지기 및 오월강사단이 운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오월지기는 보통 격년단위로, 시민 30명씩 모집되며, 5·18 사적안내지도자 정규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강의(약 4주 60시간, 수업기간 한달이상)를 받도록 했다. 매년 활동을 위해 연초 보수교육으로 답사교육 1회, 이론교육 3회 약 9시간을 교육받았다. 교육 내용은 5·18민주화운동사, 관련 문학 및 문화 등 주제별 이해, 안내기법 교육 등을 포함하였다.

청소년 체험학습 사업이 사적지 안내지도자 육성 및 운영사업과 결합된 주된 이유는 체험학습 및 안내의 전문성 제고의 필요성이 내·외부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자원활동가 및 사적안내 봉사단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체험학습과 안내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체험학습의 내용이 체계화 및 교육 대상별로 수준에 맞게 구성되지 못하다는 내부 반성이 제기되면서 청소년 체험학습은 2006년부터 사적지 안내와 교육을 전문화시킨 오월지기 양성 및 그 활동과 결합하게 되었다.

2007년 이후 사적지 체험학습은 각급 학교를 중심으로 사전 신청을 받은 후 안내 및 교육 계획을 협의한 후 안내자를 배치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2011년 이후 사적지 체험학습 및 오월지기 양성 사업은 오월길 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sup>4)</sup>

한편, 오월길사업 전반의 콘텐츠 개발에 귀기울였던 전남대장소마케팅연구센터는 도시창조관광의 새로운 교육모델 구축 및 오월길 창조인력 양성을 위해 오월길을 도시형 도보관광브랜드로 만드는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오월길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운영한 바 있다. 해당사업은 사업비가 진행되었던 해에만 진행되었다. 2012년과 2015년 시범프로그램 운영시 ‘치유’를 키워드로 한 ‘아트힐라피스트’와 ‘메이워커’ 양성과정을 운영한 바 있다.

#### 4) 오월길협의체 운영

오월길 조성을 통한 창조관광활성화 1·2차 사업을 통해 오월길과 함께 할수 있는 인력·기관을 조사하고 선정, 수차례 회의를 통해 오월길의 세부과정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역할을 나눠 사업을 진행하였다.

※오월길협의체의 구성개요

전문가 자문단	오월 거버넌스(이해관계자등)
디자인전문가, 길전문가, 걷기전문가, 편집전문가, 아카데미전문가, 치유전문가	5·18관련피해자, 5·18기념재단 등 관련피해자단체, 광주시민
Co-Work 그룹	시민파트너
지방자치단체(광주광역시 담당부서), 사업수행기관(전남대장소마케팅연구센터, 5·18기념재단)	지역예술인, 자원봉사단체, 교육자, 학생, 기타

#### 5) 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인력 및 자원)

5·18기념재단은 지난 2005년부터 광주광역시를 거쳐 국가로부터 5·18기념사업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 연간 24억내외)을 운영해오고 있는 바, 5·18기념사업, 5·18국제사업, 5·18교육문화사업, 5·18진실조사사업 등을 개최하고 있다. 오월길사업의 경우, 5·18교육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5년부터 진행해온 ‘5·18사적지체험학습’ 명칭의 사업을 2012년부터 오월길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내용을 확정하여, 사업비 확정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오월길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 V. 전망과 과제

1) 오월길은 5·18사적지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오월길로 잇는 주요공간들은 5·18사적

4) 5·18기념재단, 『5·18기념재단 20년사』, 2014, 172~173p

지로써 조례에 의거하여 관리의 책임주체는 광주광역시이다. 그러나 현재 이뤄지는 사적지 관리는 표지석과 그 주변의 청소, 미활용 공간의 외부인 출입 통제 등에 국한되어 있다.

사적지의 상당공간이 사유지이거나 소유의 주체가 다양한 점을 고려한다면 관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사적지 관리를 단순한 유지 보수적 측면이 아닌 활용에 목적을 둔다면 보다 적극적인 관리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다.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위해 지방 행정체제의 권한과 책임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를 분명히 하고 이를 지원할 부서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2)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재원확보의 불안정성은 대부분의 사업이 갖는 문제점의 하나이다. 당장 오월길안내해설자의 해설활동비, 교육훈련비에 대한 부담은 사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더라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안정적으로 유능한 안내해설자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안내해설자에게 기대치의 보상(고정적인 안내해설활동을 통한 일정 정도 이상의 안내해설비 수준)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3) 오월길 사업은 해당사업을 전문적으로 고민할 인력이 부족하다. 오월길사업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매칭펀드 형태로 두차례 예산지원이 이뤄졌던 것처럼 차기를 확정할 수 없는 단기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면 관리운영인력은 임시직 형태로 고용될 수밖에 없다. 설령 운영단체가 명확하더라도 기존 사업으로부터 파생된 사업의 경우 운영관리인력은 대부분 해당 업무에 전념할 수 없고 다른업무를 겸임하는 구조로 배치된다. 이로인한 사업의 비중 축소, 운영 책임성 저해, 단기적 안목의 사업집행구조가 우려된다.

4) 오월길은 일정하게 구조화된 프로그램과 방문객의 자발적 답사에 의해 주로 운영된다. 오월길 운영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장을 안내하는 인적 자원의 안정적인 육성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이 전제되어야 한다.

오월길 안내자는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정보와 의미 그리고 계승의 필요성을 전달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학습과 숙련이 요구된다. 지속적인 경상비(활동비, 교육훈련비)가 발생하는 만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방정부의 재원지원이 요구된다.

따라서 오월길 안내자 육성 교육의 성과와 결과 그리고 실제 적용 등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sup>5)</sup>

5) 오월길 운영은 사적지 관리와 안내시설 등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현재의 5·18사적

5) 광주광역시 『5·18기념사업 마스터플랜』 2016, 145p



지 안내시설들은 충분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각 안내시설들은 종합적인 하나의 계획에 의거해 설치된 것이 아니고 관리주체 또한 다양하다. 이런 이유로 일부 안내시설의 경우 내용이 중복되기도 한다. ‘오월길 조성사업’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예견되는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다각도의 점검과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적재적소의 시설들을 활용한 연계프로그램의 구성이 오월길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sup>6)</sup>

6) 창의적 접근을 통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완이 필요하다.

‘걸어야 할 길’이 반드시 ‘걷기 편한 길’이란 법은 없다. 오월길은 재미요소와 경관요소가 부족하고, 도심길이라 오래 걷기 불편하기까지 한 미완의 길이다.

그래서 전남대장소마케팅연구센터는 오월길의 창의적 인력양성 프로그램인 ‘오월길아카데미’를 운영함에 있어 ‘치유’의 키워드를 주목한 바 있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아픈 사건에 의해 아픈 사람들과 단절되고 소외된 공간’을 서로 연결하고, 소통하게 해주는 역할 또한 고려하였다. 이렇듯, 창의성을 발휘하여 걸어야 할 길은 걷기 편한 길이 되어 갈 것이다.

7) ‘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길을 매개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협업이 요구된다. 오월길은 5·18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고자 한다. 5·18민주화운동 그 자체로 소중한 여행의 주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방문객의 경우 해당지역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에 대해 관심이 있는 바,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지역의 다양한 참여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 VI. 결론

5·18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5·18에 대해 묻는다는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것과 같았고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묻는 것과도 같았다. 그래서 때로는 그 물음을 피하고 싶었고, 때로는 그 아픔을 잊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5·18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다. 더 이상 광주만의 것도 아니다. 그해, 그 봄 민주화를 향한 시대의 열망을 뜨겁게 품었던 5·18은 이제 평등, 인권, 평화, 상생 등 이 시대의 가치를 새롭게 품을 것이다. 오월길은 역사의 아픔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만나는 길, 어제와 오늘을 함께 만나며 새로운 내일을 여는 길, 어제의 치열한 역사를 통해 오늘의 치열한 삶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오월길에 피어난 역사이야기, 사람이야기, 문화이야기를 깊이 만나고 나면 오늘을 살아갈 힘

6) 광주광역시 『5·18기념사업 마스터플랜』 2016, 145p

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sup>7)</sup>

7) 『광주의 오월을 걷자』 VER 3, 전남대장소마케팅센터·5·18기념재단, 2016, 7p

## [참고문헌]

광주광역시 『5·18기념사업 마스터플랜』 2016

『광주의 오월을 걷자』 VER 3, 전남대장소마케팅센터·5·18기념재단, 2016

김동수외, 『5.18관련 사적지 조사 및 보존에 관한 기본 조사·설계』, 전남대학교5·18연구소, 1997

「들불열사기념사업회 홈페이지」, 들불열사 기념조형물 설명자료, 2001

정호기, 「기념사업으로 본 ‘5·18’의 의미변용」,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71호(한국언론정보학회),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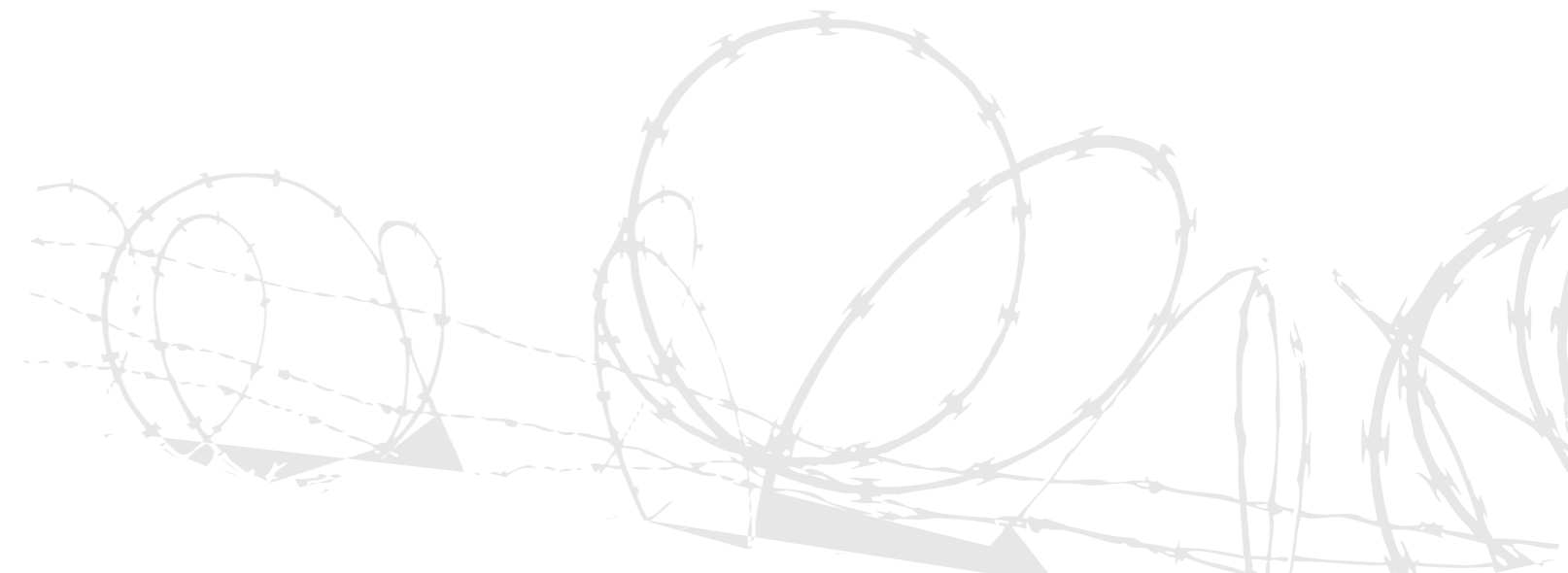
정호기,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공간 조사·연구』, 5·18기념재단, 2015

5·18기념재단·전남대장소마케팅연구센터, 『오월길 백서 vol. 2』, 2013

5·18기념재단, 『5·18기념재단 20년사』, 2014



●백가윤 / 제주다크투어 대표



## 제주다크투어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본 〈제주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언

백가윤 제주다크투어 대표

‘기억하고 싶은 길-제주다크투어’는 2017년 11월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제주 4·3 유적지를 비롯한 제주도 내 다크투어 유적지를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소개하고, 유적지들을 기록하며, 제주 4·3과 비슷한 국가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국내외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난 2년 간 제주다크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 제주다크투어 운영 현황

제주다크투어가 운영하는 다크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2018년 기준 총 1,331명 (국내 916명, 국외 415명), 2019년 상반기(1월~6월) 기준 총 700명(국내 662명, 국외 38명)으로 집계된다. 참가자들은 일제강점기 유적부터 제주 4·3 유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주도 내 다크투어 현장을 돌아보았으며 피해 생존자의 증언을 듣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기행이 끝난 후 진행한 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제주를 여러 번 다녀갔지만 이런 역사가 있는 줄 몰랐다”며 “향후 이를 기억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하였다. 제주의 역사를 기억하고 알려나가는 활동을 통해 국가 폭력의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했던 제주다크투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제주다크투어 프로그램의 특징

제주다크투어는 평화교육이자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다크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참가자들의 인권 감수성과 평화 감수성을 높여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남북관계와 동아시아 평화 문제, 미얀마(버마)의 로힝야족 이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분쟁 상황, 내전을 피해 제주에 온 예멘 난민 이야기 등 현재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4·3에 관한 이야기를 참가자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현장을 둘러보고 제주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안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으로 그 감수성이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평화협정 체결, 북미 대화 재개 등과 같은 현재의 한반도 정세와 더불어 제주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4·3 당시의 메시지가 현재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기도 한다.

제주다크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인권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평화 감수성, 생태 감수성 등이 요구되며 참가자들의 다양한 요구(채식 유무, 장애 유무, 기타 필요한 사항 등)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기행 시에는 플라스틱 생수병보다는 개인컵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식당, 숙소 등을 소개해 지역 사회에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 제주다크투어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논의

제주도 내 다크투어 유적지 대부분은 안내자 없이 찾아가기 어렵다. 길을 물어 찾아간다고 해도 현장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제주다크투어에서는 다음이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지도에 유적지를 기록하는 사업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안내자와 함께하는 기행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못하는 개인들이 지도를 보고 유적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당장 모든 유적지 현장에 안내판을 세우기 어렵다면 온라인 지도를 구축해 유적지를 기록해 나가는 작업부터라도 선행되어야 한다.

다크투어의 핵심이 되는 유적지 보존도 시급하다. 몇몇 4·3 유적지들을 제외한 다수의 다크투어 유적지들은 잊혀지거나 개발 광풍에 휩싸여 존재 자체가 미미해지고 있다.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유적지들을 정비하고 기록하는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유적지 안내판을 한/영으로 재정비 하는 작업도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점자 안내판 설치, 휠체어 접근 가능 등 장애인들의 접근권이 보장되는 유적지로 보존하는 방법도 논의되어야 한다.

다크투어의 국제화 및 대중화 사업도 진행되어야 한다. 관련 단체 중 SNS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으며 영문 사이트가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심지어 한글 사이트에도 최신 자료가 올라와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재 운영 중인 다크투어 현장에서도 영문 번역이 잘못 되어 있거나 아예 엉뚱한 이야기가 쓰여 있는 사례, 너무 오래 전에 만들어진 안내판이어서 최근 정보가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은 사례 등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 <제주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언

제주 지역의 어두운 역사를 돌아보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교육적 의미의 다크투어가 조례로 제정되는 것은 환영하나 단순한 관광 상품이 아닌 평화교육,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제안을 제시한다.

### 1. 관광 모델의 다크투어리즘이 아닌 평화, 인권 교육의 다크투어리즘

“다크투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은 역사적 현장의 상업화를 가장 우려한다. 다크투어리즘이 제주도 관광 수익 모델의 하나로 이해된다면 역사적 교훈을 얻고 현재의 의미를 되새긴다는 원래의 취지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조례 제정으로 다크투어리즘을 널리 알리고 제도화 하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볼 수 있으나 행정의 성과 남기기, 수익 모델 창출 등의 이유로 내용에 대한 고민없이 양적으로만 다크투어리즘이 증가하는 것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조례 제정에 앞서 제주도가 추구해 나가야 하는 다크투어리즘의 방향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다.

### 2. 평화 감수성, 인권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을 겸비한 다크 투어리즘 전문 인력의 양성

다크 투어리즘은 수익을 내기 위한 관광 상품이 아닌, 참가자들의 평화 감수성과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 인력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권 감수성, 평화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등을 모두 겸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전문 인력 양성 교육에 있어서 위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3. 다크 투어리즘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사업의 중복 방지

제주의 다크 투어리즘 유적 중 가장 많은 부분은 4·3 유적이 차지하고 있다. 이미 4·3 유적지는 많은 곳이 조사, 기록되어 있고 주요 유적지들에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다크

투어리즘 자원을 조사하고 실태를 조사할 때, 기존의 4·3 유적지 조사와 중복 조사가 되지 않도록 기존 자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 4. 주민 참여형 사업과 지속가능한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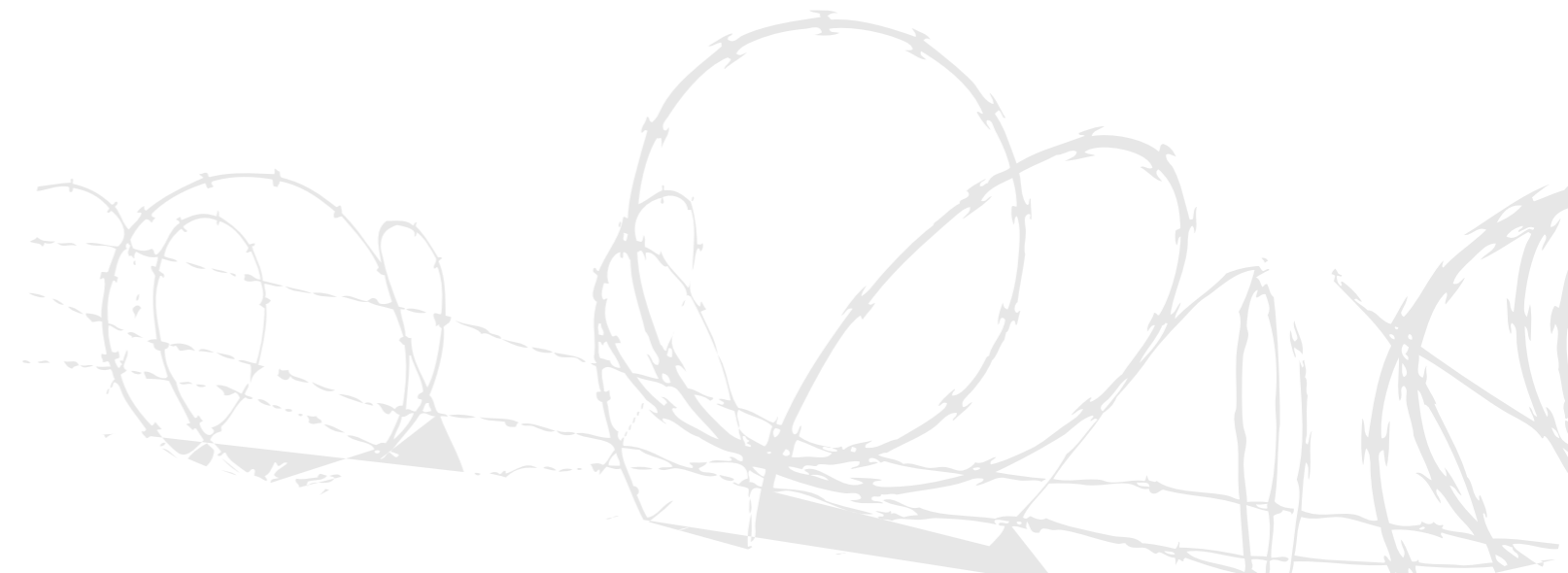
제주 지역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태관광과 다크투어리즘을 함께 결합해야 한다. 기행 참가자들은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식당, 숙소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장려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하여 참가자들에게 플라스틱 생수병 사용을 자제하고 개인 컵 사용을 장려하는 등 환경을 생각하고 생태 감수성이 높아있는 다크투어리즘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 5. 전국 다크투어 네트워크 허브로서의 역할

4·3 70주년을 계기로 민간 차원에서의 다크투어리즘은 제주도에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타지역에서도 다크투어리즘 사례를 보기위해 제주도를 찾고 있다. 제주다크투어도 전국 다크투어 현장과의 연대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오키나와, 대만 등 다른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다크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제주도 차원에서도 향후 제주를 넘어 다른 지역 현장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다크투어리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현혜경 /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 토 론 문

현혜경(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 1. 제주 다크투어 개념의 등장과 초기 전개

4·3사건과 관련하여 '다크투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제주에서 언급된 것은 2006년 11월이다. 제주민예총 정책심포지엄 <4·3문화예술운동의 과제와 60주년>에서 서울대학교 정근식 교수가 '4·3진상규명운동, 제도화와 문화자원화'란 발표에서 말콤 폴리와 존 레논 교수의 다크투어리즘을 소개하면서 '관광의 메카인 제주에서 4·3유적지를 중심으로 4·3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이에 기반 하여 한국의 평화통일이나 동아시아 평화를 기원하는 다크투어리즘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하였다.

이 제안은 곧 제주지역사회에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연구자들을 비롯하여 그해 7월에 출범한 제주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제민일보사 등이 관심을 가졌다. 제주지역에는 일본군전적지를 비롯하여 4·3관련 역사유적지들이 산재되어 있어서 이것을 활용하면 중요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여겨졌다. 다만 주체들에 따라서 다크투어를 바라보는 입장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였던 것 같다.

하나의 입장은 민주시민단체를 중심으로 4·3진상규명운동이 제도화 단계로 들어서면서 어떻게 4·3의 기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활성화시켜나갈 것인지 모색하는 하나의 사회문화운동으로서 4·3문화유산의 자원화와 다크투어리즘이 논의되었다.

다른 하나는 기존의 제주여행 상품을 대신하여 새로운 제주여행 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관광사업자들의 입장으로, 자연풍광 및 테마파크 위주의 제주 관광 관광에 식상해 있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상품개발과 문화소비의 차원으로 다크투어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졌다. 한편 에코투어리즘과 같이 탈근대적인 관광 혹은 여행의 대두가 다크투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초기 4·3다크투어를 둘러싸고 사회문화운동과 관광산업(문화소비산업)이 어떻게 조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당시로서는 사회문화운동이 관광산업(문화소비산업)과 결합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우려가 있었다. 실상 4·3과 관련된 원초적 유산의 제도화 및 산



업화 방안은 사회문화운동과 관광산업(문화소비산업)의 경계에서 4·3다크투어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 2. 제주 다크투어의 본격적인 확산과 새로운 담론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주지역에서는 다크투어라는 개념 아래 좀 더 많은 활동들이 확산된 것을 볼 수 있다. 4·3 60주년, 70주년을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4·3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전국의 수많은 연대조직들이 4·3관련 다크투어를 향유하였다. 그 동안 다크투어를 전개하는 본격적인 단체들이 생겨났고, 일본군전적지 및 4·3관련 역사유적지와 문화유산들을 엮어 벨트화 하거나 프로그램화 하려는 경향들도 나타났다(예: 평화대공원, 진아영할머니 삶터 보존회 등). 그 과정에서 '다크투어'라는 이 외래 용어를 그냥 사용하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한 반문들도 나타났다.

4·3다크투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70주년을 기점으로 경험세대가 본격적으로 소멸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운동과 산업화를 넘어 교육과 계승의 문제로 그 관심이 확장되고 있다. 동시대에 머물러 있던 시선이 시계열적 시선으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경험세대가 소멸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의 장소와 교육문화컨텐츠만이 후체험세대의 기억 계승을 도울 장치로 부상하고 있어 교육적 측면에서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조례를 만들고 제도화하여 후체험세대의 기억 경로를 만들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또한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간의 소통 매개 및 경로를 만들어주는 것도 다크투어가 가진 영향력이 될 수 있다.

4·3다크투어는 초기 사회운동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현재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서, 그리고 트라우마 치유의 공간으로서, 후세대 기억계승의 장(미래 교훈의 장)으로서, 다크투어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장 등 여러 갈래로 그 활용이 모색되고 있다. 따라서 조례를 통해 제도화를 할 때 무엇(혹은 어떠한 지향점)을 조례에 담을 것인가는 중요한 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에도 남북화해와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평화대공원 사업 추진 부분들이 언급되었다. 제주 다크투어가 나갈 지향점이 과거 4·3에 대한 기억의 회생만이 아닌 인권 혹은 평화, 미래의 통일 의제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이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3. 왜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는가?

다크투어는 사회운동이면서 문화소비의 경계에도 있기 때문에 이 둘 간의 균형을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균형이 깨지면, 다크만 남든지, 투어만 남기 때문이다. 둘 다 민간영역에 있기 때문에 균형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을 메니지할 수 있는 중심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중심기관의 설치를 통하여 다크투어의 하드 및 소프트 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개발하고, 보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다크투어의 경우는 장소성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훼손하는 사례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장소성을 기반으로 하는 수많은 이야기자산과 프로그램 운영은 소프트 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개발하는 데서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제도화단계에 접어들면서 제주 다크투어에 대한 개념의 정의, 중장기 계획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주에는 4·3만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한국전쟁, 4·3사건, 강정마을, 제2공항문제 등 일련의 한국 전쟁사와 재난사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이것을 거시적인 차원의 테마로 묶을 수 있는 안목과 기획력도 필요하다.

나아가 다크투어는 '투어'가 가지고 있는 '유행성(시대성, 속도성)'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와 세대를 거치면서도 4·3과 같은 재난에 대한 기억의 활력과 세대계승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의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다.②

##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8조 및 「관광기본법」 제6조,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54조, 제73조에 근거하여 제주지역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크 투어리즘”이란 4·3사건 등 제주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의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생명·평화·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역사교훈 관광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크 투어리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다크 투어리즘 육성계획) ① 도지사는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크 투어리즘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사업
2.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크 투어리즘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다크 투어리즘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및 주민 참여형 사업 활성화 방안
5. 다크 투어리즘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다크 투어리즘 기반 조성 등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8조 및 「관광기본법」 제6조,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54조, 제73조에 근거하여 제주지역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크 투어리즘”이란 4·3사건 등 제주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의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생명·평화·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역사교훈 관광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크 투어리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다크 투어리즘 육성계획) ① 도지사는 다크 투어리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다크 투어리즘 육성과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크 투어리즘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사업
2.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크 투어리즘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다크 투어리즘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및 주민 참여형 사업 활성화 방안
5. 다크 투어리즘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6. 다크 투어리즘 기반 조성 등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 사업
8. 그 밖에 다크 투어리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도 대표 다크 투어리즘 관광지 지정·육성) 도지사는 다크 투어리즘 관련 대표관광지를 지정하고 육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 및 육성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다크 투어리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다크 투어리즘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4·3관련단체 및 관광업계 인사, 교육계 인사, 해당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계획
2.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시행계획
3. 다크 투어리즘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4. 다크 투어리즘 대상 유적 지정 및 다크 투어리즘 해설사 인증 등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다크 투어리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도지사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주고, 상정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일부터 5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다크 투어리즘 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다크 투어리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크 투어리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원 및 실태조사
2. 다크 투어리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3. 다크 투어리즘 관련 해설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4. 다크 투어리즘 관련 교육사업
5. 다크 투어리즘 관련 안내책자 발행 및 홍보사업
6. 다크 투어리즘 관련 민간 협력 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7. 다크 투어리즘 지역 주민 지원 및 다크 투어리즘 사업 컨설팅
8. 그 밖의 다크 투어리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다크 투어리즘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행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064)741-228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김석윤)

